

2009친환경농업 육성정책 방향 어떠하나?

미생물농약 등 신규 지원 밀수농약 근절 위한 법 개정

정부는 미생물농약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인증단계 간소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며 농약의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밀수농약의 보관·진열·사용한자까지 처벌토록 농약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장



지난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생산자인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잠정집계한 결과를 보면 저농약 인증을 제외하고 전체 농산물중 4%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중을 2013년까지 10%(저농약인증 제외)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및 녹비작물재배를 통한 토양관리와 유기질비료 및 천적, 미생물농약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생산자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친환경축산기반 확대, 친환경인증 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육성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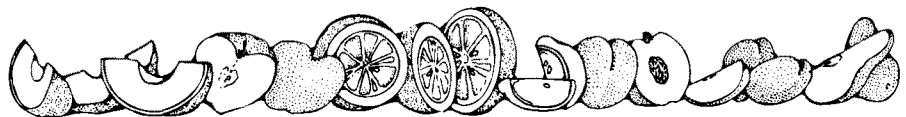
인증간소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먼저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사용 절감을 위해 토양 지력증진과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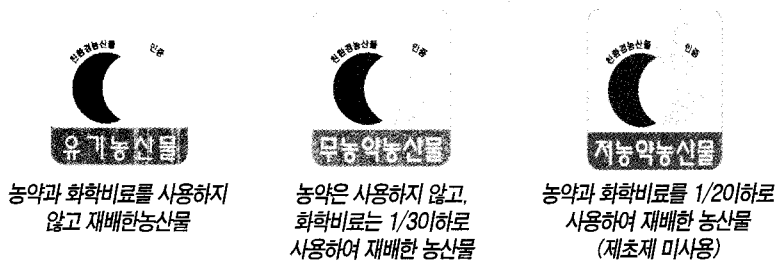
우리나라 토양은 밭의 산성도가 높고 눈에 유효규산이 낮아 지속적인 토양개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2009년에는 석회·규산 등 토양개량제 60만톤(651억원)을 전액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과중하여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얻는 자운영·호밀·헤어리벳지 등 녹비작물재배 지원사업(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138천ha(135억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작년보다 56만톤 늘어난 210만톤(1,218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원에 재배면적 2,500ha에 대해 천적활용 해충 방제비 37억원을 지원하며 1,000ha에 대해서는 미생물농약 활용 병해충방제비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인증 표시 ('08, 3월 개정)



다음으로 집단화·규모화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단위 10ha규모로 조성하는 친환경농업지구는 2009년에 44개소를 신규 조성(누계 992개소)하고, 지난 2006년부터 시·군단위 1,000ha규모로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11개소(누계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축산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면적을 99천ha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직불금도 423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하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조치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낮추도록 농가지도와 지원을 한다.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공동자원화시설 20개소(누계 40개소), 액비유통센터 26

개소(누계 10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농·축협 등 경종농업과 축산간 협약을 체결한 조직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09년 17개소, 272억원)을 강화하고,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비료공정규격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 관리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의 잔류농약 검사(생산단계 6천점, 유통단계 1만5천점),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판품 조사,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명예감시원제도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인증제도 간소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인증단계를 유기·무농약 인증으로 간소화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유통관리 강화 농약관리법 개정 추진

아울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를 도모하고 소비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나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을 448억원으로 확대하고, 2009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수도권지역(경기도 광주)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홍보·판촉 등 소비촉진을 위해 14억원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장·학부모·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현장체험을 25회 정도(1,000명)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끝으로 농약의 유통관리 강화와 농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산 밀수입 농약 사용과 녹차에서의 잔류농약 검출,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 안전과 농약의 유통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농약의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밀수농약을 제조·수입·판매

한 자 뿐만 아니라 보관·진열·사용한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농약 판매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농약관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과 협력하여 보따리상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및 밀수농약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름,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자재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시험용·학술연구용 농약수입증명서 발급업무의 민간위탁, 제조(수입)농약 품목변경 신고 간소화 등 기업 활동을 제한시키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1,000ha, 약 8억4천만원의 미생물농약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효능이 좋은 생물농약 개발을 위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생물농약 R&D사업(45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Y